

# 정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예고

## “구미~대구~포항 벨트로 받자”

### 대구·경북인 함께 대책마련을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FEZ) 추가 지정을 예고함에 따라 충북도, 포항시 등이 발빠르게 지정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손을 놓고 있어 시·도가 함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조세부담 경감 등 법적인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 대구·경북으로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안이다.

◆경제자유구역 ‘하루하루가 달라진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진해, 인천, 광양만권 3

개 권역은 대형 개발사업과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지도를 바꿔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도·청라지구 등 6천300여만 평에 동북아 물류허브를 위한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물류산업단지, 151층 규모의 인천타워와 아시아트레이드센터, 1천600여만 평의 국제업무단지, 서울 코엑스몰의 9배나 되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이 조성되고 있다.

전남 광양만권도 광양(복합물류), 울촌(신산업), 하동(업무), 화양(관광레저), 신덕(주거) 등 5개 지구에 2천700여만 평이 개발되고 있고 항

만과 배후부지, 연계교통망 등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 전북 군산, 강원 동해권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충북도는 최근 실무팀을 꾸려 FEZ 지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 대상지역과 개발사업 발굴 등 실무작업에 들어갔고 포항시도 자체적으로 FEZ 지정을 위해 조만간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의 경우 FEZ 후보지로 포항, 구미 일대가 손꼽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미-대구-포항을 잇는 권역을 아울러 FEZ로 지정받아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구 동

·수성구와 경북 경산·영천 등 금호강 권역 2천500만 평을 ‘지식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하자는 제안과도 접목하면 구미-대구-포항 3개 지역 모두가 윈-윈 할 수 있고, 3개 권역이 별도로 추진할 때보다 FEZ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밟는다는 것.

김만제 낙동포럼 이사장은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이 인천, 부산, 광양권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내륙의 대구와 경북도는 국가 발전축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FEZ 대구·경북유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포럼 등은 앞으로 세미나 등을 통해 대구·경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공론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